

출제유형분석

총론	10	재무행정론	4
정책론	8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5	행정환류	3
인사행정론	6	지방행정론	3

01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국세감면의 제한
-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 강화
- ③ 초과조세수입의 국채 우선 상환
- ④ 국가보증채무부담시 국회의 사후승인 의무화

**해설** ①·②·③ [O] 국가재정법 제88조 조세(국세)감면의 관리, 제89조 추경예산안 편성의 제한, 제9조의 2, 제92조의 국가채무관리계획, 제90조 세계잉여금의 국채·차입금 우선 상환 등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④ [X]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사후승인X).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561

▶ ④

02 다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 ② 강등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해설** ① [O]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② [X]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이다.  
 ③ [O]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이다.  
 ④ [O]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516, 536

▶ ②

**03 동기부여 이론들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머슬로의 욕구단계론, 앨더퍼의 ERG이론, 브룸의 기대이론(VIE)은 과정이론이 아닌 내용이론에 속한다.
- ② 머슬로의 생리적 욕구는 앨더퍼의 성장욕구와 유사하다.
- ③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 따르면 위생요인의 변화는 동기요인의 변화를 가져온다.
- ④ 브룸의 기대이론에서는 기대감(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이 동기를 결정한다.

**해설** ① [×] 머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하지만, 브룸(Vroom)의 기대이론(VIE)은 내용이론에 속한다.  
 ② [×] 머슬로의 생리적 욕구는 앨더퍼의 생존욕구와 유사하다.  
 ③ [×]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에 따르면,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상호독립되어 있으며, 위생요인의 충족은 불만을 줄여줄 뿐 동기요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동기요인의 증대가 인간의 자기실현 욕구에 자극을 주고 동기요인의 변화를 가져온다.  
 ④ [○] 브룸은 동기의 강도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66, 368, 370, 376

▶ ④

**04 정책결정 모형인 최적모형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절충할 수 있는 모형이다.
- ② 합리적·종합적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순수한 합리성에 대한 현실적인 차선책(second bests)을 제시한다.
- ③ 점증주의적 정책의 개선으로 합리적 종합적 모형(Rational Comprehensive Model)이 아니라 규범적 최적모형(Normative Optimum Model)을 제시한다.
- ④ 직관, 판단, 창의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extra-rational factors)를 강조하지 않는다.

**해설** ① [○] 최적모형은 정치적 합리성(현실)과 경제적 합리성(이상)을 조화시키려 한다.  
 ②, ③ [○] 드로어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모형이 계량적 요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점증모형의 타성적·선례답습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모형을 제시한다.  
 ④ [×] 최적모형은 직관, 판단, 창의 등과 같은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인 초합리적 요소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42, 243

▶ ④

**05 정책의 유형별 사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징정책 - 누진세제도
- ② 규제정책 - 직업훈련사업
- ③ 재분배정책 - 공정거래법
- ④ 구성정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설** ① [×] 누진세제도는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상징정책이란 정부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 증진을 위해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이다.  
 ② [×] 직업훈련사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분배정책에는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

공,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있다.

③ [×] 공정거래법은 대표적인 독과점 규제 관련 법이다. 따라서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④ [○] 구성정책이란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구조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으로 정부기관 신설(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선거구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179, 180

▶ ④

### 06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및 차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반면, 경영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정치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경영은 시장실패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반면,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은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 ③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 ④ 경영은 자유로운 시장진입 가능성으로 경쟁에 노출되는 반면,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② [×]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 반면, 경영은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 I 행정과 경영

유사점 : 공사행정일원론(정치행정일원론)	차이점 : 공사행정일원론(정치행정일원론)
① 관리기술적 측면(목표달성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의 동원과 활용) ②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조직의 관리 ③ 합리적이고 집단적 협동행위	① 행정 ⇨ 공익실현, 경영 ⇨ 이윤극대화 ② 행정의 정치권력적 성격(공권력을 배경) ③ 행정의 엄격한 법적 규제 ④ 행정에 대한 평등성, 형평성의 요청 ⑤ 행정의 독점성 ⑥ 행정의 넓은 관할 및 영향범위(전 국민이 대상)
행정관리론 : Wilson, Gulick, Urwick, Fayol 행정행태론 : Simon, Barnard	통치기능설 : Appleby, Dimock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3

▶ ②

### 07 UN과 OECD에서 구분하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E-consultation :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유형
- ② E-management : 정부가 조직관리의 구체적인 결정을 국민에게 위임하는 유형
- ③ E-decision making : 정부가 중요 쟁점을 공론화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유형
- ④ E-information :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유형

해설 ② [×] UN이 제시한 전자거버넌스의 발달단계는 전자정보화(e-information) → 전자상담(e-consultation) → 전자결정(e-decision making)이다. 전자관리(e-management)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Ⅰ 전자민주주의(UN)

단 계	내 용
전자정보화(E-Information)	전자적 정보공개,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전자자문(E-Consultation)	시민-선출직 공무원 간 온라인 상호소통, 청원, 정책토론과 피드백
전자결정(E-Decision)	주요정책과정에 시민의견 반영과 결과 공개

참고 compass 행정학 정보화사회와 행정 p.690



08 다음 중 조직에서의 강화 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연속적 강화는 학습의 어떤 단계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의 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관리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 ② 매월 20일에 봉급을 주는 것은 고정 간격 강화의 한 예이다.
- ③ 생산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는 고정 비율 강화의 한 예이다.
- ④ 변동 비율로 강화 요인을 제공할 때에는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사이의 시간 간격을 너무 길게 하지 않게 해서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해설 ① [×] 연속적 강화는 성과가 나올 때마다 강화해주는 것으로 초기단계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이거나 강화효과가 빨리 소멸한다.

Ⅰ 강화일정

연속적 강화			성과(바람직한 행동)가 나올 때마다 강화, 초기단계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이거나 강화효과가 빨리 소멸함(관리자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함).
단속적 강화	간격강화	고정간격강화	부하의 행동이 얼마나 발생하던 미리 결정되어 있는 일정한·규칙적 시간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   매월 25일 봉급지급
		변동간격강화	강화요인을 사용하는 시기에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변동적·불규칙적 시간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사용하는 것, 칭찬이나 인정 같은 적극적 강화요인과 회피 같은 부정적 강화요인을 사용할 때 효과적
	비율강화	고정비율강화	일정한 빈도 또는 행동의 일정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   생산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
		변동비율강화	불규칙적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 봉급의 인상이나 진급 같은 보상을 강화요인으로 사용할 때에는 적합하지 못함. 강화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부하의 경우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79



**09** 다음 중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적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든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 ② 현대적 리더십은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 리더십에 비해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이 있다.
- ④ 서번트 리더십에서 봉사란 부하들을 육성하고, 지지하며,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설** ① [O] 리더십에 대한 특성론적 접근법은 리더십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면, 행태론적 접근법은 어떤 사람이든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리더십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다. 즉, 행태론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리더의 행동과 다르며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행된 접근법이다.  
 ② [X]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 리더십이라면(대표적으로 거래적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은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대표적으로 변혁적 리더십).  
 ④ [O]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에서 잠재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리더십으로서,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도와 주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81, 386

▶ ②

**10** 행정학의 방법론 중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 ①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②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 ③ 지식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④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해설** ①, ② [O] 행태주의는 사회현상의 연구도 자연과학처럼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논리실증주의를 행정의 연구에 도입하였다.  
 ③ [X]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의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 행정의 적실성의 문제는 후기행태론, 신행정론에서 강조한 개념이다. 행태주의는 사회문제 해결의 적실성, 실천성이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④ [O] 행태주의는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하고(가치중립성),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16, 117

▶ ③

**11 행정학의 방법론 중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 ①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한다.
- ②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
- ③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다.
-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설** ① [○]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비시장적 의사결정부문(정책결정구조, 투표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의 연구에 활용한다.  
 ② [×] 월슨류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정치가 행정의 업무를 설정하지만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 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인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오스트롬은 이러한 월슨류의 행정패러다임과 다른 공공선택이론을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스트롬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조직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 공공선택론은 전통적 정부관료제가 조직화된 압력 단체들의 영향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며, 시민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임을 비판하였다.  
 ④ [○] 공공선택론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존중이 핵심가치이며, 분권화되고, 협동화 된 다원조직체를 통해 행정의 대응성 향상과 공공재 배분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추구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26, 127

▶ ②

**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체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가장 잘못 알려진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으로 고위직 성별 대표성이 증가할 것이다.
- ②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다.
- ③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 성과창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④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 취임 기회가 공직 내외부에 확대될 것이다.

**해설** ① [×] 고위직에 있어 성별 대표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제도인 여성관리자 임용확대와 같은 대표관료제이다.  
 ②, ③, ④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 고위직의 성과와 책임성의 확대, 고위직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429, 433

▶ ①

**13**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상 직위분류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전문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하는 직류를 두고 있다.
- ② 성격이 유사한 직렬들을 묶어 놓은 직군을 두고 있다.
- ③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을 의미하는 등급을 두고 있다.
- ④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뜻하는 직위를 두고 있다.

**해설** ③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class)이다. 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 직위분류제의 구조**

직위(position)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1 00 담당)
직 무 분 석	직류 (sub-series)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1 행정직렬내 일반행정직류와 재경직류)
	직렬(series)	직무 종류가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1 행정직군내 행정직렬과 세무직렬)
	직군(group)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1 행정직군, 기술직군)
직 무 평 가	직급(class)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1 행정 9급, 세무 9급)
	직무등급 (grade)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1 9급)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447

▶ ③

**14** 다음 중 지방재정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는 무관하게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게 나타난다.
- ③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4종류의 이전 재원을 합친 재원이다.

**해설** ① [○]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주재원} (= \text{지방세 수입}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세입총액}}$

② [○]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므로 의존재원이 적고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재정자립도는 높게 나타난다.

③ [○] 일반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지출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질 수 있다.

④ [×] 자주재원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은 의존재원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798, 818

▶ ④

**15** 신공공관리론적 정부혁신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제시된 신공공서비스론의 논리와 가장 맞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에 근거하고 있다.
- ② 신공공서비스론은 신행정학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형평성과 대응성 등을 강조하였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집단이나 계층, 지역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정책결정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규범적 특성과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 수단적인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

**해설** ① [O]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기초는 민주적 시티즌십, 시민사회모형, 사회공동체이론, 조직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에 근거하고 있다.  
 ② [O]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신행정학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형평성, 대응성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③ [X] 신공공서비스론은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집단이나 계층, 지역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정책결정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용이하다.  
 ④ [O]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이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민주적 목표의 성취를 위한 수단적·기술적 전문성을 소홀히 다룬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66~168

▶ ③

**16** 다음 세계 각국의 정부혁신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유럽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행태나 문화변수, 관리기법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능률성 진단, Next Step, 책임집행기관 창설 등의 방법을 추진하였다.
- ② 일본은 중앙집권체제에 입각한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하향적이었고,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 ③ 영국형 개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민영화나 결과지향적 행정, 복식부기방식의 정부회계, 시민헌장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 ④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시절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혁신을 단행하여 고객지향적 행정, red-tape 제거 등 기업가형 내지 기업형 정부로 변화를 추진하였다.

**해설** ① [X]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행태나 문화변수, 관리기법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능률성 진단, Next Step, 책임집행기관 창설 등의 방법을 추진한 것은 영국이다.  
 ② [O] 일본식 모형은 발전국가의 위기와 거품경제의 붕괴 속에서 점진적·제한적 혁신이 특징이다. 주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방식이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환류 p.716~720

▶ ①

**17**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 ②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하는 기관분립형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소기업지도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세로는 인지세와 증여세 등이 있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는다.  
 ② [O]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방식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는 기관 분립형(기관대립형)이다.  
 ③ [O]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시험연구, 중소기업지도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X] 인지세와 증여세는 국세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768, 775

▶ ④

**18**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개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 ②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③ 형평적 분배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불완전경쟁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 ① [O] 공유지의 비극에서 개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사적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인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② [X]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③, ④ [X]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의 집합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한 이론이다. 형평적 분배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이나 불완전 경쟁과는 무관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35

▶ ①

**19** 행정통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은?

- ①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이 증가하면 행정통제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② 행정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비공식적 절차에 의한 통제를 제한하여 행정과 시민 간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 ③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 ④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통제가 추진되나 이익집단에 의해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해설** ① [O] 정보의 공유는 자체가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행정책임의 확보와 함께 통제비용을 상당부분 축소시키게 된다.  
 ② [X] 행정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투명행정을 통해 비공식절차에 의한 폐단을 제거하고 행정과 시민 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  
 ③ [O]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를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④ [O]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익집단에 의해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환류 p.703

▶ ②

**20** 다음 중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내용의 타당성
- ② 목표수준의 적절성
- ③ 평가의 신뢰성
- ④ 내적 일관성

해설 ①, ②, ④ [O]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적합성(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목표 구조상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X] 평가의 신뢰성은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I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목표내용의 적합성(appropriateness)	정책목표의 내용은 적합해야 함. 시대적 상황의 가치와 이념에 가장 적합한 목표이어야 함.
목표수준의 적절성(adequacy)	정책목표의 수준은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보다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여야 함.
목표연계의 일관성(consistency)	정책목표들 사이에는 내적 일관성이 견지되어야 함. 하위목표는 상위목표의 수단이 되는 연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목표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비추어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권기현 「정책분석론」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13, 214

▶ ③

**2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주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 ① 정부의 활동은 민간부문 등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② 행정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영화, 민간위탁을 활성화한다.
- ③ 주된 행정관리 방식은 사후적 대처이다.
- ④ 정부의 역할은 주로 방향 잡아주기 역할이다.

해설 ①, ② [O]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부문 등에 부여하고, 행정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영화, 민간위탁을 활성화한다.

③ [X] 전통적 정부의 행정관리방식이 주로 사후적 대처라면, 기업가적 정부는 사전예방이다.

④ [O] 과거 전통적 정부의 역할이 노젓기(rowing)라면, 신공공관리론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44

▶ ③

**22** 다음 중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항은?

- ① 시간엄수(punctuality)
- ② 효율(efficiency)
- ③ 정의(justice)
- ④ 신뢰(trust)

**해설** ④ [O] 사회적 자본은 상호신뢰, 호혜주의, 친사회적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 적극적 참여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68

▶ ④

**2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은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를 통하여 행정체제 전체를 개혁하려는 방법이다.
- ② 기관형성전략은 바람직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③ 구조기술적 접근은 OD(조직발전)나 TQM(총체적 품질관리)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 ④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은 구조와 인간, 환경의 문제를 체제로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다.

**해설** ① [O] 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은 개혁의 초점을 인간에 두는 방법으로 태도와 가치관을 개선하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체제를 개혁하려는 방법이다.  
 ② [O] 기관형성전략은 목표에 맞는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행정개혁에 관한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X] OD(조직발전)나 행태과학, 사회심리학에서 개발한 감수성 훈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이다. OR, EDPS, BPR, TQM 등은 기술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④ [O]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통합적 접근법)은 개방체제의 관념에 입각하여 분화된 접근법들을 통합하여 개혁을 달성하려는 접근법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환류 p.709, 710

▶ ③

**24**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영화와 민간위탁, 정부보조금 삭감 내지 폐지, 정부통제의 완화 등 작은정부론이 실천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② 완전시장경쟁체제의 한계성과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 ③ 내부성과 X-비효율성, 비용체중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네트워크형 행정체제 내지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 등이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해설** ② [X] 완전시장경쟁체제의 한계성과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은 시장실패의 근거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행정국가가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정부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43, 144

▶ ②

**25**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조직목표 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직학습이 중요하다. 조직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구성원 간 지식의 공유를 활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조직의 과거 성공에 기반 한 정례화 된 경험학습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조직 내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하여 집권화 된 조직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학습 담당자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해설 학습조직에 대한 문제이다.

③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규칙이나 표준운영절차(SOP) 등 과거 성공에 기반 한 정례화된 경험학습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분권화된 조직구조를 통해 구성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37~339

▶ ③

**26** 다음 중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무임승차의 문제
- ② 축적성과 유형성
- ③ 비경합성
- ④ 비배타성

해설 ① [○]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비용부담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나 서비스 혜택으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하고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② [×] 공공재는 비시장성, 비축적성(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축적되기 어려움), 비경쟁성, 계량화가 어려운 무형성의 특성을 갖는다.

③, ④ [○]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33, 34

▶ ②

**27** 다음 중 '현실 적합성의 신조(credo of relevance)' 및 '실천(action)'과 가장 관련 깊은 사항은?

- ① 생태론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 ② 행태론적 접근(Behavior approach)
- ③ 후기 행태론적 접근(Post-behavior approach)
- ④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

해설 ③ [○] 후기행태주의는 1960년대 미국 내 급박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행태주의가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자 당시의 정치·행정학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등장한 이론이다. 1960년대 말 이 스텐(D. Easton)은 '적실성의 신조(credo of relevance)'와 '실천(action)'을 강조하는 후기 행태주의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17

▶ ③

**28** 정책분석(PA : Policy Analysis)과 체제분석(SA : System Analysis)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분석은 비용과 효과의 사회적 배분을 중시하지만 체제분석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 ② 정책분석은 대안의 평가기준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체제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에 주안점을 둔다.
- ③ 정책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의 양적 분석에 치중하지만 체제분석은 질적 분석을 중요시한다.
- ④ 정책분석에 활용되는 기본과학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이지만 체제분석에서는 경제학과 응용과학 등이다.

**해설** 정책분석에는 세 가지 차원의 분석(관리과학, 체제분석, 정책분석)이 있다. 대체로 정책분석쪽으로 갈수록 정치적 고려가 많아지는 상위차원의 분석으로 공공부문에 적합하며, 관리과학으로 갈수록 기술적·계량적 분석기법으로 민간부문에 적합하다.

① [○] 정책분석은 비용효과의 사회적 배분이나 정치적 효과까지 고려한 분석이며, 체제분석은 능률성(효율성) 또는 실현가능성 차원의 분석이다.

② [○] 정책분석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체제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에 보다 주안점을 둔다.

③ [×], ④ [○] 정책분석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의 영향을 받은 질적 분석기법을 이용하며, 체제분석은 경제학과 응용과학의 영향을 받은 비용편익분석이 핵심기법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09, 232

▶ ③

**29** 행정통제의 구분에서 정책결정의 비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 ① 정당
- ② 이익집단
- ③ 언론기관
- ④ 입법부

**해설** ①, ②, ③ [○] 정당, 이익집단, 언론기관 등은 정책결정의 비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④ [×] 입법부는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이다.

**I 공식적 참여자 vs 비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대통령, 입법부, 행정기관과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 등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등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185

▶ ④

**30** 정책결정모형에서 선호의 불명확성(problematic preference), 불투명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fluid participation)등의 현상과 조건에서 적용되는 정책결정 모형은?

- ① 관료정치모형
- ② 쓰레기통모형
- ③ 만족모형
- ④ 혼합주사모형

**해설** ② [○]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성 있는 선호 (불분명한 선호)	의사결정이 진행되면서 선호를 발견 (참여자가 스스로의 선호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
유동적 참여자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자들이 유동적임
불명확한 인과관계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불분명한 지식과 기술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45, 246



### 31 정책결정 모형인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결정상황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분석한다.
- ②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 ③ 이익집단의 견해와 의견들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이론이다.
- ④ 정치적 접근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정책분석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방식이다.

해설 ④ [X]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 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모형이다. 점증모형은 정치적 접근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설득, 조정하고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정책분석 방법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구 분	합리모형(root method)	점증모형(branch method)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가정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를 전제
가치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
목표와 수단	목표와 수단의 엄격한 계층제	목표와 수단의 상호작용
결정절차	총체적이고 체계적 분석 (연역적 접근)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귀납적 접근)
최적화	전체적 최적화의 추구	부분적 최적화
결정내용	대폭적 변화가능 (쇄신적 정책결정)	소폭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보수적 정책결정)
환경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설명력	개발도상국에 적합	선진국 사회에 적합
이론의존성	이론에 크게 의존함.	비교의 연속으로 이론에 의존할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거의 없음.
좋은 정책	목표달성의 최적수단	다양한 참여자들의 동의
효용	정책의 합리적 분석에 기여 쇄신적 정책결정을 가능케 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실행가능성을 고려 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 모형
한계	완전한 경제인 등 가정의 비현실성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의 낭비 기득권과 현실의 무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가능성 정책의 축소·종결의 어려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기존정책의 오류시 계속적 악순환 초래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39, 240



**32**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조직 변화의 개입기법은 무엇인가?

고객 중심주의, 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여, 벤치마킹,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의 만족과 성과 향상을 모색하는 총체적 생산성 향상 전략이다.

- ①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② OD(Organization Development)
- ③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④ MBO(Management By Objectives)

**해설** ① [O] TQM에 대한 설명이다. TQM 방식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조직 내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수행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리방식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401, 404, 407, 412

▶ ①

**33** 다음 표의 빈칸 A-B-C-D에 적합한 내용들끼리 가장 잘 배열한 것은?

구 분	장 · 단점	
	계급제	직위분류제
행정전문화	저해	촉진
외부환경변화 대응력	약함	강함
현직자의 근무의욕	( A )	( B )
제도 유지비용	저렴함	비싼 편임
부서 간 협조와 교류	( C )	( D )

- A      B      C                      D
- ① 낮음 - 높음 - 원활함                      - 원활하지 못함
  - ② 높음 - 낮음 - 원활하지 못함 - 원활함
  - ③ 높음 - 낮음 - 원활함                      - 원활하지 못함
  - ④ 낮음 - 높음 - 원활하지 못함 - 원활함

**해설** \* 현직자의 근무의욕 :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게 되어 공무원의 경력발전 기회가 증진되며, 폐쇄체제로 운영되므로 장기간 근무와 내부승진을 통해 현직자의 근무의욕에 기여한다.

\* 부서 간 협조와 교류 : 계급제는 일반행정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탄력적 인사운명을 통해 공무원의 시야와 이해력을 넓혀 부서 간 · 처차 간 협조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위의 전문가를 요구하므로 횡적 의사소통이나 협조 · 조정이 곤란하다.

구 분	장 · 단점	
	계급제	직위분류제
행정전문화	저해	촉진
외부환경변화 대응력	약함	강함
현직자의 근무의욕	(A = 높음)	(B = 낮음)
제도 유지비용	저렴함	비싼 편임
부서 간 협조와 교류	(C = 원활함)	(D = 원활하지 못함)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445, 446, 450

▶ ③

**34** 다음의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쇄효과란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집중화 경향이란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경향을 의미한다.
- ③ 총계적 오류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란 평정의 요소와 관계가 없는 성별·출신학교·출신지방·종교·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가지는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③ [×] 총계적 오류란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말한다.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은 규칙적(체계적) 오류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478, 479



**35** 다음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공무원의 복무 상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등 취업 제한
- ② 성실 의무
- ③ 품위유지의 의무
- ④ 종교중립의 의무

**해설** ① [×]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등 취업제한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헌법상 의무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충성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13대 의무)	①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④ 친절·공정의 의무, ⑤ 비밀엄수의 의무, ⑥ 청렴의 의무, ⑦ 외국정부의 영예 등 수령 규제, ⑧ 품위유지의 의무, 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⑩ 정치 운동의 금지, ⑪ 집단 행위의 금지, ⑫ 선서의 의무, ⑬ 종교중립의 의무(2009. 2월 신설)
공직자 윤리법	① 선물수수 신고·등록의 의무, ② 이해충돌방지 의무, ③ 주식 백지신탁 의무, ④ 재산등록의무, ⑤ 재산공개의무, ⑥ 퇴직 후 취업제한 및 취업제한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521



**3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예산제도에서 공무원의 회계책임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② Top-Down 제도에서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가 강조된다.
- ③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점증주의식 예산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 ④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

**해설** ① [×]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의 최

중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② [O] Top-Down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제도로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가 강조되며, 한도 내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중시된다.  
 ③ [O] 월다브스키는 영기준예산제도가 결국 점증주의에 귀결되며, 실제로는 영기준이 아니라 90%예산이라고 비판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636, 645, 651

▶ ①

### 37 수입대체경비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초과경비를 의미한다.
- ②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인한 일용직 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③, ④ [O], ② [X]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도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포함된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615

▶ ②

### 38 다음 중 정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② 재정활동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 ③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과 전출
- ④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해설** ①, ②, ③ [O]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성과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는 국가재정은 용계회의 수립(국가재정법 제7조),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동법 제29조),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신축적 운용(동법 제13조), 성과중심재정운용(동법 제8조) 등이 있다.
- ④ [X]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보다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양성평등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 예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561, 562, 575

▶ ④

### 39 정책평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능률성은 비용과 관련시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 ② 효율성과 효과성은 서로 대치되는 평가기준이다.
- ③ 대응성은 조직내부집단의 만족도와 관련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 ④ 적절성은 설정된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측정이다.

- 해설** ① [X] 능률성은 비용과 관련시킨 대안에 대한 평가로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효과성이다.
- ② [X] 효율성과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서로 부합되는 평가기준이지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 ③ [X] 대응성이란 성취된 정책 결과가 특수 이해관계 집단, 즉 조직외부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 주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 ④ [O] 적절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책목표의 달성 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즉, 정책목표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78, 225

▶ ④

### 40 다음의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5년 실시된 제주도 주민투표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것으로 현행 유지안과 단일광역자치안(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폐지) 중 선택하는 것이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 등 일정 요건 하에 주민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대표적인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6항).
- ② [O]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 ③ [O]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투표권이 부여 될 수 있다(동법 제5조).
- ④ [X]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786~788

▶ ④